특별기고

모두가 ‘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김준영
광주시 시민안전실장

지난 여름 광주는 426.4㎜에 달하는 기록적 호우로 도로와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며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던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어느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시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기후위기의 영향이 일상에서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계절별 재난 위험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북대서양과 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온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바렌츠-카라해 해빙 감소로 찬 공기의 남하가 반복될 수 있어 기온의 변화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며칠 사이에 따뜻한 날씨와 강추위가 급격히 교차하는 불안정한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강설량과 결빙 상황이 평소보다 예측하기 어렵고, 짧은 시간 내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겨울철 폭설과 한파는 시민의 이동과 생활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교통 혼잡, 수도계량기 동파, 한랭질환 등 여러 형태의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5년간 광주 지역에는 대설 8.8회, 한파 2.6회 등 기상특보가 꾸준히 발효됐으며, 한랭질환자도 연평균 4.6명 발생했다. 지난겨울에는 총 6명의 환자가 보고되는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크다. 자연재난의 위험성은 일상 속에서 지나치기 쉽지만, 한 번의 강설과 급격한 기온 변화가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음을 사례들이 보여준다.

광주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올해 겨울은 ‘피해를 줄이는 체감형 대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0월 14일부터 한 달간 사전 대비기간을 운영하며 사전대비 추진반을 구성하고 적설취약구조물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중점관리 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위험구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보수·보강 필요 여부를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최대한 줄였다.

대책기간(11월 15일~3월 15일)에는 24시간 기상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 기상특보 발효 이전에도 상황판단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대응 방향을 조정하며, 특보 발효 시 즉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보고체계에 그치지 않고, 부서 간 협업과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을 신속하게 가동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도로 제설 분야에서는 525개 노선(총 680.4㎞)을 우선 관리 구간으로 지정하고, 상습 결빙·사고 다발구간 128개소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와 열선 등 제설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출퇴근 시간대 강설이 예보될 경우에는 사전 제설제 살포를 강화해 주요 도로 결빙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GPS 기반 제설차량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제설차량의 이동 경로와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제설 공백을 최소화한다.

도시 내 취약시설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적설 취약시설물은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시장·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동절기 생활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수도계량기 동파와 같은 생활 불편도 즉시 처리한다.

한파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도 올해 대책의 중요한 축이다. 광주시 전역에 1400여개의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버스정류장·공원 등 이용이 많은 생활공간에는 방풍텐트, 온열의자 등 한파저감시설을 설치해 누구나 쉽게 한기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독거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2만3600여명을 대상으로 한파 취약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경로당에는 연 2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겨울철 재난 대응은 행정의 역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폭설 대응은 시민의 참여가 핵심적인 요소다. 2022년 12월, 40㎝에 달하는 폭설에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내 집 앞·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해 큰 피해 없이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은 공동체의 힘이 겨울철 안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임을 보여준다. 올해도 시민의 참여가 폭설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빙판길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전동킥보드, 자가용 이용을 가급적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고가도로, 언덕길, 그늘진 도로에서는 서행운전이 필수적이며, 차량 운전자는 겨울용 타이어 사용, 배터리 점검 등 기본적인 차량 관리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광주시는 “예방이 최고의 대응”이라는 원칙 아래, 사전 점검부터 대응·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민의 작은 실천과 관심이 광주의 안전한 겨울을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완성된다.

기고

소외 없는 대한민국, 인간성 회복의 첫걸음

김순권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장

소외된 지역과 소외된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인간성 회복의 출발점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고착화될수록 공동체의 연대는 약화되고, 인간의 존엄은 쉽게 훼손된다.

호남은 오랜 세월 국가 발전 과정에서 구조적 소외를 감내해 온 지역이자, 민주주의 회복의 최전선에서 헌신해 온 지역이다. 이 땅의 역사적 희생과 인내가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다면, 이제는 그 대가로 실질적 균형 발전과 사회적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라는 기치는 바로 이러한 시대정신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존중받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이다. 호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산업기반과 인재양성, 공공기관 이전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RE100 산업단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해남 솔라시도 등 지역의 특화산업을 국가 성장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단순한 예산 배분이 아닌 ‘지역 자립형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학과 지역기업이 함께 혁신의 거점이 되고, 지역 청년이 일자리와 삶의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복지의 강화다. 인간 존엄의 핵심은 ‘함께 사는 사회’에 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기본복지체계의 확립과 돌봄의 국가책임제 실현이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길이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속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은 국가 복지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다. 복지 행정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람을 잇는 복지’로 진화해야 한다.

셋째,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의 제도화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주권자 의사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의사 결정에 실현되는 과정이 민주주의다. 법원도 국민주권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의 일부 재판 과정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돼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주민이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분권형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의 진정한 실현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자발적 실천과 시민 참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이 변화의 현장에는 언제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있다. 자원봉사는 제도적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실천이자,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사회로 연결하는 다리다.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재난복구, 공명선거 캠페인,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의 밑거름이 돼왔다. 앞으로도 정부의 3대 과제와 연계해 자원봉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내 사회적 약자와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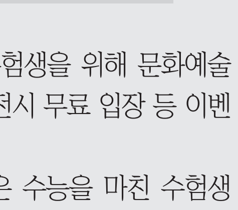
소외된 지역이 줄고, 소외된 사람이 줄어드는 나라야말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진정한 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한 지역의 자존을 세우는 일상적 정의의 복원이다. 그 길 위에서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실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불빛이 될 것이다.

국가의 품격은 GDP(국내총생산)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진정한 인간성 회복의 사회,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취재수첩

문화예술계 수험생 이벤트, 단순혜택 아쉽다

정채경
문화체육부 차장대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위해 문화예술계가 공연예술 입장권 할인과 전시 무료 입장 등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ACC를 방문해 진행 중인 전시를 관람하고 캐릭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게재하면 공연 입장권이나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연극 ‘걸리버 여행기: 줌인 아웃’ 공연을 앞두고 기존 3만원인 입장권을 수험생에 한해 1인 4매까지 전석 1만원에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독립영화관은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이 현장예매할 경우 영화관람권을 5000원에, 전남도립미술관은 수험표를 지참한 관람객에 무료입장을 제공한다.

물론 문화예술행사 입장료는 학생들에게 부담이기에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인 문화예술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손색은 없다.

하지만 단순한 일회성 혜택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수능 이후 수십만 명의 청소년이 첫 자율 시간을 맞이하는 시기, 막 세상에 나오기 위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청소년들에게 내미는 첫 손이 문화예술이라면 무엇보다 따뜻한 경험이 될 것이어서다. 수험생 대상 이벤트에서 나아가 수능 직후 청소년 문화주간 같은 모델을 정착시켜야 하는 이유다.

이들은 향후 문화예술을 소비하고 발전시킬 새로운 관객층으로 확장될 수 있다. 향후 예술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세대라는 이야기다. 문화예술이 청년 성장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깔려야 하는 배경이다.

이는 도시를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예술적 감수성이 열린 상태에서 겪는 문화예술적 경험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정서 회복, 도시 체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 입장에서도 이 시즌을 겨냥한 특별 기획은 문화예술 아카이브 확장과 신규 창작물을 실험하는 무대가 될 수 있을 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객층이 다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수험생 대상 이벤트가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미래 관객 육성이라는 대전제 하에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설

대기업 미래산업 투자 유치해야 하는 이유

대기업들의 향후 국내 투자계획이 지난 16일 발표됐다. 삼성그룹은 2029년까지 5년간 국내 연구개발(R&D)을 포함해 총 450조원을 투자키로 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총 125조2000억원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했다.

두 기업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힌 것으로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공백 우려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다.

특히 이들 기업의 투자 방향이 단순히 생산설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AI·로봇·그린에너지·전동화 등 미래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가장 관심사는 이들 기업의 광주·전남 투자다.

먼저 삼성그룹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이달초 인수를 완료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그룹’의 한국 생산라인을 광주에 건립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플랙트는 중앙공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광주시에 생산라인이 건립되면, 삼성전자의 개별 공조 시스템과 플랙트의 중앙공조 사업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즉 광주가 ‘가전 산업의 메카’라는 기존 명성에 더해 차세대 고부가 공조기기 생산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 특수목적회사 컨소시엄 주사업자인 삼성SDS는 전남도에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 서남권에 1GW 규모 PEM(고분자전해질막) 수전해 플랜트를 건설하고, 인근에 수소 출하센터 및 충전소 등도 설립할 예정인데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그린수소 생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전남도가 유력 후보지다.

2028년까지 국내에 128조원을 투자키로 한 SK그룹도 오픈AI와 공동으로 전남에 서남권 초대형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투자는 단순한 공장 유치를 넘어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협력사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들 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 광산 ‘천원주차장’ 좋은 교통정책 사례

광주 광산구가 지난 4월 도입한 ‘천원주차장’이 효과 만점이다. 시행 1년도 안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천원주차장은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천원 더 가치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생활형 교통정책으로 서민경제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중심 상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 2시간 주차요금을 1000원으로 인하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말한다.

현재 광주송정역 뒤, 무진로,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 광산문화예술회관 옆, 운남동, 수완동행정복지센터 옆, 수완문화체육센터 지하, 하남3지구 주차타워 1·2 등 광산구내 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천원 더가치프로젝트’는 ‘천원’이라는 상징적인 가격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12개 정책과제를 일컫는데 ‘천원 한끼’,‘천원택시’, ‘천원 수거보상제’, ‘천원 기부’, ‘천원 문화마실’, ‘천원 파크골프’ 등이 있다.

각설하고 ‘천원주차장’은 시행 8개월째 접어들면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시행 전 3만9555대였던 월 이용대수가 시행 후 4만5263대로 14% 증가했고 특히 광주송정역 뒤 주차장의 경우 2시간 요금을 1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더니 이용률이 27%나 상승했다. 요금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 우려도 기우여서 오히려 주차장 전체수입이 지난해 대비 26~29% 증가했다. 이용률 확대와 수익 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이다.

또 시행 후 상가 방문객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법주정차가 줄어들면서 도로 혼잡 완화와 골목상권 활력 회복 효과는 물론 저렴한 요금으로 시민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광산구는 또 야간 이용률이 낮은 일부 공영주차장 8개소를 지난 5월부터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무료개방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호응이 좋다. 시행 전 7000대였던 야간 입차대수가 시행후 9000대로 33% 늘었으며 특히 3시간 미만 단기 주차가 증가해 이면도로 불법주차 해소와 주민 주차 편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 광산구의 합리적 주차정책이 이처럼 빛을 발하고 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부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치부	370-7010	논설실	370-7060
경제부	370-702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사회교육부	370-7030	임원실	370-7000
지역사회부	370-7040	총무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업국	370-7090
편집부	370-7082	광고국	370-7070
사진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